

광주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 실효 놓고 공방 가열

시의회 “국비 3600억 가운데 단 5% 만 귀속…개발 편중” 우려
광주시, 실증은 해당 지역 수행 원칙…50% 이상 수혜 가능

광주의 차세대 인공지능 프로젝트 ‘인공지능 집적단지 2단계(AX 실증밸리)’ 사업에 대한 지역 파급효과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사업 설계가 개발(R&D) 중심에 치우쳐 실질 성과가 지역으로 환류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질타했고, 시는 “광주 몫이 5%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기(광산구 5선거구) 의원은 지난 7일 인공지능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총사업비 6000억 원 가운데 국비 3600억 원 중 ‘AX 연구개발 혁신기반’ 306억 원만 지역 귀속으로 잡혀 있고, 4000억 원대 R&D가 전국 공모로 분산되면 광주는 ‘시험장’만 제공하고 성과는 외부로 흡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공지능(AI)은 알고리즘 개발보다 현장 데이터 기반의 성능 검증과 레퍼런스 축적이 사업화의 관건”이라며 “1단계에서 구축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핵심 인프라가 ‘개발 편중’ 속에 사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공지능융합사업단의 3본부 체계 전환을 두고

서는 “전문가·외부와 사전 협의 없이 조직을 키운 효율성 논란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수훈(서구 1선거구) 시의원도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에서 “시민 체감형 과제가 빠진 계획서는 ‘연구기관·기술인력만 배 불리는 구조’”라고 쓴소리를 냈다. 특히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실패와 관련해 “전력·용수 공급계획 자료조차 제때 내지 못한 준비 부족이 부른 예견된 결과”라며, 유치 실패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도전 전략·행정절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두 의원은 공동으로 2단계 적정성 재검토와 사업제안요청서(RFP)에 ‘광주 실증 의무’와 ‘지역 기업 참여 쿼터’ 명시를 요구했다. “광주와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이 300곳을 넘는 만큼, 실증과 레퍼런스가 지역에서 쌓이는 구조를 지금이라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광주 몫 5%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맞섰다. 시는 대구·전북·경남 등과 함께 정부 AX R&D를 전국 공모로 추진하되 각 지역 사업에 지방비가 투입되는 만큼 ‘실증은 해당 지역

에서 수행’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 산·학·연이 과제를 맡을 경우 평가·선정에서 우대해 “전체의 50% 이상 지역 수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1단계에서도 지역 수행 비중이 절반 수준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2단계 기획·공고 주체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인공지능융합사업단(AICA)으로 전환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 “지역 참여 폭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또 “AI 2단계는 기술개발(R&D)로 나온 제품·서비스를 실증·상용화까지 있는 구조”라며 “특히 시민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모두의 AI’, ‘도시·생활 혁신 과제’를 포함한 지자체는 4개 추진 지자체(광주·대구·전북·경남) 중 광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준비 부족 지적에는 “우리 시는 2025년 4월 40MW 전력계통영향기술 평가 승인과 상수도 공급 관련 검토를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1050억 원 규모의 ‘AI 이노스페이스’ 조성으로 피지컬 AI 실증 거점을 구축해 개발과 실증, 사업화를 한 곳에서 묶고, R&D 결과물의 지역 확산을 통해 AX 생태계를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행정감사 브리핑

“양성평등기금 예산 분배 성과 중심 재설계해야”

최지현 광주시의원

광주시 양성평등기금이 형식·반복적 지원에 치우쳐 시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지현(광산 1선거구) 시의원은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성평등기금이 매년 비슷한 사업을 같은 단체에 반복 지원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평가지표와 신규 참여 통로를 손보고, 예산 배분 구조를 목표·성과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경북 사례처럼 청년·가족·다문화까지 아우르는 ‘성평등 가족 기금’으로의 전환을 검토해 정책 파급력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여성가족재단 분석에서는 기금 사업의 40% 이상이 동일 단체에 반복 지원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최 의원은 “몇몇 단체 중심의 폐쇄적 구조에선 시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며 “공모 설계부터 성과확산까지 전 과정의 투명성과 경쟁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실제 성평등가족부 2024 지역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의 2023년 성평등 종합점수는 63.7점으로 전국 평균 67.1점에 못 미쳤고, 가사노동·육아휴직 등 돌봄 영역은 최하위권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경력단절과 돌봄 부담, 고용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기금이 ‘행사 지원’에서 ‘구조 개선’으로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수협 배만 불려…개선 시급”

김주용 전남도의원

전남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수협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주용(민주·비례) 도의원은 지난 6일 열린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정작 어민 보호에는 미흡한 반면 시행기관의 이익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0~2024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납부된 보험료는 1538억원이지만, 같은 기간 어민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95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험료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



놓은 지원금만 최소 1452억원이라는 점에서 공적 재원이 어민을 보호하는 목적보다는 시행기관인 수협의 이익을 창출하는 역할을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실효성 부족과 어가의 불신·가임기피 심화에 대한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며 “수협의 최근 5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수익률이 30%를 상회한다. 수협만 이익을 보는 것은 명백한 보험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가 어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전남 소방 구급대 인력 공백 위한 실질 대책 필요”

박종원 전남도의원

육아 휴직을 신청한 전남 소방 구급대원들의 대체 인력 수급률이 감소하면서 도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종원(민주·담양1) 도의원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구급대원의 대체인력 충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도민 생명안전 공백을 막기 위한 실질적 인력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종원 의원에 따르면 전국 구급대원 육아휴직자 대비 대체인력 충원율은 2021년 54.7%, 2022년 56.4%, 2023년 57.2%, 2024년 54.9%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는 42.4%로 급락했다. 박 의원은



“육아휴직자 10명 중 6명은 대체인력 없이 근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급대 운영 효율성과 도민의 생명안전 서비스 저하로 직결되는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전남의 대체인력 충원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71%)이긴 하나, 전남은 농어촌 지역이 많아 의료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구급대원 한 명의 결원도 도민 한 명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조적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예비인력풀 운영, 인력 순환보강 체계 구축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 인력운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울긋불긋 물들었네” 9일 오전 담양 관방제림을 찾은 시민들이 짙은 녹음과 붉게 물든 메타세쿼이아가 어우러진 수변을 따라 징검다리를 건너며 늦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전남 9개 항구 선정

전남도, 사업비 898억원 확보

전남도가 “해양수산부의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9곳이 선정돼 사업비 898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여수 두포항, 순천 대

대항, 고흥 남열항, 강진 수인항, 해남 학가항, 무안 도원항, 영광 월곡항, 완도 금일관문곶, 신안 상태도항 등 총 9곳으로 전체 선정지(34곳)의 26%에 해당한다.

선정된 항구마다 최대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어촌의 열악한 생활·안전 인프라와 생

활서비스 확충을 통해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 35개 항구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로 선정, 3241억원을 유치했다.

전남도는 사업계획 수립 초기부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 수요에 맞춘 전략을 펼친 결과 많은 수의 항구가 증진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